지방자치분권 활성화·양과동 매립장 악취 문제 쟁점

▌특별시의회 시정질문

GGM 부당 노동행위 질타‥동부권 과학고 신설도 제안
나흘째 국립의대 신경전…서남권 의료대책 마련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악취 문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갈등 등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립의대 공모와 관련한 서남권 의원들의 반발도 나흘째 이어졌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이날 제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지방사무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재원이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보통세로 조정하도록 규정돼 지역별 조정금액이 균등하지 않아 행정통합 후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가 자체 균형발전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교부금을 지금 당장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균형발전지수 등 몇 개의 지표를 통해 교부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적 관련 법규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내년에 1000억원으로 시작해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제기됐다.

최경미 의원(진보당·광산구3)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은 전국 생활 쓰레기매립장 중 유일하게 거주지 2㎞ 내에 위치해 있다"며 "여름철이면 매립장 인근 효천지구까지 악취가 번지고 있고, 시민들은 2023년부터 저녁마다 바람의 방향을 수기로 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신경 써야 할 일을 주민에게 부담되도록 방치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민호 의원(진보당·북구2)은 GGM의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GGM의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비방 등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면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며 "대주주인 통합특별시가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GGM 출범 후 구성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결국 두 기구가 충돌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시처럼 노동자권력국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민 시장은 "대주주여도 문책할 권한이 없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관 산하 5개 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대립은 나흘째 이어졌다. 문애준 의원(민주당·비례)은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당시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과 심사 공정성, 자료 공개 문제 등을 물었다.

민 시장은 "후보대학 선정 평가와 실제 의대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심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법률 자문에서도 잘못된 평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강성찬 의원(민주당·목포2)은 국립의대 선정에 따른 서남권 의료공백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목포역 복합환승센터를 통합특별시가 직접 추진하고 목포항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민주당·여수6)은 여수 웅천에 동부권 과학고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청소년지도사 대회 '하나 된 광주전남 미래를 향한 청소년지도사의 힘'을 주제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대회'에 참석한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과 청소년지도사 들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재정 불균형 해소 촉구

교부율 상향·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22개 시·군과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남구 한 식당에서 10월 정례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핵심 건의안을 특별시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안건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 조례안 제정 등 2건이다.

세부적으로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3.9%에서 27%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 건의 조례안에는 균형발전기금이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의 재정 안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조례 제정 단계에서 '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 및 자치구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5개 자치구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행정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강 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장은 "5개 자치구가 통합특별시로부터 받는 교부율이 시·군보다 낮아 교부율 상향과 기금 내 안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논의된 안건이 통합특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남구 한 식당에서 10월 정례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핵심 건의안을 시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무등산 면적 60% 사유지…국립공원 평균 두배"

신정훈 "매입예산 2023년 이후 '4분의 1 토막'…확충 시급"



무등산 국립공원의 육상면적의 60.7%가 사유지로 전국 국립공원 평균의 두배에 달해 보다 적극적인 사유지 매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사유지 매입예산이 3년 새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이 지난 2023년 700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 지난해 273억원, 올해 163억원으로 감소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3년 새 537억원(76.7%)이 줄어든 것으로 2023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9%가 사유지이며, 해상 면적을 제외한 육상 면적 기준 사유지 비율은 전국 평균 31.6%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육상 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금정산(79.1%) △팔공산(69.6%) △무등산(60.7%) △가야산(58.1%) △내장산(56.4%) △계룡산(46.6%) 순으로 높았다(산악형 국립공원 18개소 대상).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78.5%)과 다도해해상(66.1%)도 바다를 제외한 육상 구역의 사유지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도심과 인접한 부산 금정산(79.1%), 대구·경북 팔공산(69.6%), 전남광주 무등산(60.7%)은 사유지 비율이 전국 국립공원 육상 면적 기준 비율(31.6%)의 약 두 배에 이르거나 이를 웃돌았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매입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땅을 묶어놓고 정작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은 4분의 1로 줄였다"며 "정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안정적인 매입재원을 확보하고, 보호가치와 함께 사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체계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선원 교육 4.7배 늘었는데 현장은 1564명 부족"

문금주 "교육→자격→취업→승선까지 성과관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15일 "해양 선원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선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교육인원을 얼마나 배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얼마나 진입했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해운조합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수원 교육인원은 지난 2021년 768명에서 지난해 3625명으로 4.7배 증가했다. 2022년 1330명, 2023년 1890명, 2024년 2832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2392명이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 확대와 별개로 내항선원 현장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항상선은 지난 2016년 2285척에서 지난해 2332척으로 47척 증가했지만, 국적선원은 7854명에서 7534명으로 320명 감소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내항선원의 59.4%인 4478명이 60세 이상인 반면, 25세 미만은 175명으로 2.3%에 불과했다. 해기사 역시 60세 이상 비중이 지난 2016년 50.2%에서 지난해 58.2%로 8.0%p 증가했다.

현장의 인력 부족도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내항상선 필요인원과 현재인원을 비교하면 해기사는 428명, 부원은 1136명 등 총 1564명이 부족했다. 한국해운조합은 향후 10년간 특히 5·6급 해기사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교육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에도 교육받은 인력이 실제 현장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연수원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미래 해양산업 관련 교육인원이 768명에서 3625명으로 4.7배나 증가했는데, 정작 교육받은 인력이 취업하고 실제 승선했는지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원의 역할은 단순히 교육생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현장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교육 규모와 교육과정이 현장 수요에 맞는지 판단하려면 교육→자격취득→취업→승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새청무' 벼, 고온·집중호우에도 수량·품질 안정

전남광주농기원 6품종 비교…완전미율 가장 높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벼 품종 '새청무'가 고온과 집중호우 조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량과 쌀 품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은 이상기상이 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새청무를 포함한 6품종의 기후 적응성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기상 여건에 따른 수량과 품질 변화를 살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새청무는 고온과 집중호우가 발생한 조건에서도 연도별 수량 차이가 작아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성을 보였다.

품질 평가에서도 쌀알의 외관 품질을 나타내는 완전미율이 조사 대상 6품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함량도 낮게 나타났다.



마경철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장은 "기상 여건이 달라져도 수량과 품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품종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종과 재배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은 기상자료와 품종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기후 적응성을 분석하고,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 선발·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전남광주 '2026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선정

옛 광주시 주민점검신청제·드론 활용 등 안전관리 성과 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2015년부터 시행된 범국가적 안전관리 정책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61일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옛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공사·공단, 민간 전문가 등 총 3057명이 참여해 어린이집, 공동주택, 전통시장, 교량,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598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 443건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현장 조치가 가능한 156건을 즉시 개선했다.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20개소를 신규 발굴·점검하고, 시민안전관찰단과 함께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요인까지 면밀히 살피는 등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도 높였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시민참여와 첨단장비를 활용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